데스크 칼럼

예술인이 행복해야 '문화 도시'다

박 진 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이달 초, 다시 찾은 체코 프라하의 카를교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이곳은 코로나19 탓인지 한산하기만 했다. 프라하 시민들로 보이는 몇몇이 마스크를 벗은 채 다리를 배경으로 '여유롭게'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3년 전만 해도 인파에 치여 후다닥 기념사진을 찍고 자리를 떠야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새삼 코로나가 남긴 일상의 변화를 실감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귀에 익숙한 바이올린 선율이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을 연주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블타바강으로 잔잔하게 퍼지는 애절한 선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카를교엔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고

'예술의 도시' 빈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노마스크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노천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시민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벨베데레궁전, 레오폴트 미술관, 알베르티나 미술관 등은 백신 접종을 마친 관람객에 한해 전시장을 개방하고 있었다. 빈 관광의 꽃으로 불리는 콘서트는 매일 밤 수십 여 개의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오랫동안 움츠렸던 예술 현장이 기지개를 켜며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광주에서 청년 작가 A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는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아트페어에 참가한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작품 판매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그에게 아트페어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것만큼 반가운 뉴스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술인만큼 직격탄을 맞은 이들도 많지 않을 터. 실제로 광주 지역 예술인들의 수입은 월 평균 197만 원으로 전국 평균 월 39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지난 2018년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 '예술인복지 지원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 특히 전업 예술인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46.2%에 그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근근이 버텨 왔던 무대마저 사라졌으니,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지난해 5월 광주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예산으로 진행한 '300, 소리 없는 아우성' 공모사업은 예술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다. 당시 재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응원 메시지를 선정해 금남로 일대에 배너로 설치하기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300명(1인당 30만 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워낙 갑작스럽게 편성한 사업이다 보니 내부에선 홍보가 부족해 신청자가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웬걸, 반나절 만에 400명의 지원자가 쇄도하는 바람에 서둘러 공고문을 내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작 30만 원의 지원금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예술인들이 앞다투어 몰려든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지역 예술인들의 생활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예술인 긴급 재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이어졌지만 유감스럽게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난 데다 소액이어서 생계가 막막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끼니 걱정 없이 창작 전념할 수 없나

물론 광주시의 넉넉지 않은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 초부터 서울·부산·충남 등 일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광주시는 지난 8월말에서야 뒤늦게 '지역예술인 활동환경 실태조사'에 들어가 '문화 광주'의 체면을 구겼다. 게다가 지난해 8월 광주시립극단의 갑질·성희롱 그리고 불공정 계약 행태까지 제기된 이후 1년이 지난 올 9월에서야 창·제작 지원 강화 및 문화예술인 권리 증진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분야 13개 지원 과제를 발표해 '뒷북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모름지기 '문화 도시'라 하면 예술이 융성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삶과 예술 속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 사는 예술인의 현실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영역의 의제인 것이다. 문화광주의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광주다운' 예술인 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예술인들이 불행한 도시는 더 이상 문화 도시가 아니다.

은펜칼럼

학술 정보 플랫폼과 정보 개방을 통한 지식 공유

심 명 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

우리는 지난 1년 10개월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팬데믹을 기점으로 학술 정보산업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 정보산업 환경의 변화는 도서관 장서 및 이용자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자자료의 다양화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자료를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집콕' 하는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전자책(e-book)을 비롯한 국내외 전자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도서관 또한 보존 공간 및 관리 비용 절약 등의 이유로 전자 자료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전자 자료 중 학술 저널은 연구자들에게 지식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 정보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효용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전자 자료가 도서관 장서 구성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일반 단행본을 제치고 도서관의 핵심 장서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술 저널은 그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라 하더라도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순간 상용(商用) 출판사에 저작권이 양도되어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여 라이선스를 얻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자료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독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자신이 쓴 논문을 이용할 때조차도 출판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술 정보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해서 원활한 학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유통 패러다임인 오픈 액서스(open access)가 등장하게 됐다.

전자 저널 구독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업 출판사가 독점한 고비용 유통과 물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매년 5~7%가량 상승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의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저널 활용이 어려워져 특히 중소 규모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핵심 저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연구 몰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모든 이용자들이 재정적·법적·기술적 장애 없이 무료로 논문의 전문을 읽고, 다운로드 하고 복제·배포·인쇄·검색·링크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해서 원활한 학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유통 운동이 부다페스트 선언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진전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최근 다시 가속화되어 가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오픈 액서스 정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국내 학술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5개의 기관이 상업 거래의 고리를 끊고 논문을 이용자에게 무료로 개방하자는 오픈 액서스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학술 정보를 오픈해서 펜데믹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일면서 오픈 액서스 패러다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독일 연구단 및 유럽의 17개 연구기관들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오픈 액서스는 단순히 학술 정보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다.

지식 정보의 공유와 확산 그것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임에 틀림없다. 세계 각국의 학술 정보 교류와 신속한 연구 협력으로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1년도 안돼 접종까지 가능해지고, 먹는 치료제가 개발된 것을 우리는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오픈 액서스의 가치와 영향력은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패러다임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 연구의 뿌리가 되는 학술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를 개방하는 차원의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열린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연대하고 더 큰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시기이다.

기 고

국가 중요 어업유산, 흑산 홍어잡이의 가치

최 현 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목포의 어느 홍어 맛집을 방문해 홍어 고수와 왕초보 간 상반된 시식평을 하는 장면을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다. 고수는 잘 씻은 묵은지에 돼지고기 수육과 홍어 한 점을 싸서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삼키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반면 초보는 오른손으론 간신히 홍어 한 점을 집고, 왼손으로는 자신의 코를 막으며 오만상을 짓고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향을 낸다고 평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어의 맛은 삭힌 홍어로 기억하는 것 같다.

전남 신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와 홍어의 만남은 조금 다르다. 어느 늦가을 마을에서 혼례식이 있었고, 어린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국수를 끓이는 커다란 솥, 전을 부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한 마당에서 그 무엇보다도 잔칫집 분위기를 내는 것은 당연히 홍어 요리였다. 아버지는 연분홍색의 홍어 한 점을 소금에 찍어 나의 입에도 넣어주셨는데, 물컹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맛은 고소하고 향긋했으며 아버지가 드셨던 막걸리의 시큼한 향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교통이 불편하던 옛날에는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가 육지인 목포나 나주까지 도달하는 시간 동안, 홍어 피부에 있는 요소 성분이 암모니아로 변해 특이한 맛과 향을 내게 되었고, 이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고급 식품으로 사랑받아 왔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홍어를 먹으면 장이 깨끗해지고 술독이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귀한 음식으로 왕에게 진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홍어가 예로부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잡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흑산도에서는 홍어의 서식지와 조류의 방향을 잘 아는 어업인들이 홍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미끼가 없는 주낙(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어구)을 설치하여 홍어를 잡는다. 미끼를 사용하지 않으니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끼를 위한 생물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또 이 어업은 홍어 외에 다른 어종은 잡지 않으니 타 업종 어업인과 갈등도 없으며, 홍어잡이 어업인들은 연간 정해진 양만 잡기로 한 총허용 어획량제(TAC)를 실시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흑산 홍어잡이 어업을 제11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해 보전·관리하기로 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해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말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녀 어업, 보성 뻘배 어업, 완도 지주식 김양식 어업 등 총 11개가 지정돼 있다.

흑산도의 홍어잡이 어업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이 김약행의 '유대흑기'(1770년)임을 고려하면 최소 2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생태친화적 방식의 이 전통어업은 이 지역 생계 유지 수단일 뿐만 아니라 홍어 경매, 홍어 썰기 학교, 홍어 축제 등 흑산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흑산 홍어잡이 어업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흑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앞으로 3년간 이 어업의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 관광 홍보 상품 개발, 브랜드 개발, 홍보·체험관 건설 등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도 흑산 홍어잡이 어업과 주변 지역의 축제, 어촌체험 휴양마을, 과학관, 박물관 등 먹거리·볼거리·즐길 거리를 연계하여 어업인만의 유산이 아닌 국민 모두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어의 맛에 대해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마는 생태친화적인 방법으로 어획하고 독특한 발효 방식으로 가공되는 홍어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해 널리 사랑받기를 기대해 본다.

社 說

전기차 시대 '정비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

광주·전남 지역에 전기차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비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내연기관차의 엔진이나 변속기가 빠진 대신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간 전기차는 고장이 날 경우 동네 카센터에서는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04대에 불과했던 연간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3816대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6년간 광주·전남에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540대에 달한다.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문제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달리 고장이 나면 동네 정비업체에서는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동네 카센터들은 전기차 수리를 의뢰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로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고가의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깔려 있는 전기차의 경우 잘못 건드리면 고액의 수리비를 물어 줘야 하고, 모터 등에 고압 전류가 흘러 감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전기차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주행 거리 및 충전소 확대는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정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100개인 전기차 정비소를 2025년까지 세 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대기업 완성차 제작사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에 국한된 것이다. 동네 카센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주축으로 한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어 10년 뒤쯤에는 내연기관차는 구매조차 힘들어질 전망이다. 전기차 확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비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전기차 정비 교육과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사라진 40분 KT 먹통' 원인 철저히 밝혀내야

KT의 유무선 통신망이 엊그제 40분가량 마비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전국의 상점·은행·병원·학교 등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경제적 피해도 상당했다. 특히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증권거래 시스템, 상점 결제 시스템, 기업 업무 시스템 등이 불통됐다. 전국 학교와 유치원의 원격수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식당과 편의점에서는 현금결제를 해야 했고 배달 앱은 이용 불능이었다.

교육부는 이날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전국 12개 교육청 관내 7742개 학교·유치원과 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 및 가상통화 거래소 접속도 중단됐다. KT 인터넷 서비스망과 연결된 대다수 증권사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이 끊기거나 한동안 접속되지 못했다.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날 발생한 통신 장애는 정오쯤 대부분 복구됐다.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장애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처음에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가 뒤늦게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라고 정정했다. 내부 장비와 시스템의 고장 또는 관리 문제가 원인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이름이 민망한 사고이다.

이번 사고는 정보화 사회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인터넷 먹통 사태는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화 시대의 안보는 통신망을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정보통신 마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과와 조롱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SNS에 올린 '개 사과' 사진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을 넘어 호남 지역민들의 심정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개 사과' 논란은 애초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촉발됐다.

윤 전 총장이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한 것이 민심을 들끓게 했다. 여권과 호남에서 윤 전 총장의 사죄를 요구하고, 대선 후보직 사퇴까지 촉구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전두환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광주 시민들을 총검으로 대량 학살한 원흉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언론 통폐합에 인권을 말살한 삼청교육대 운영, 대학생 강제 징집 등 반민주적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 기업 퇴출 등도 서슴지 않아 독재정권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전두환에 대해 '쿠데타와 5·18을 빼면 모두 잘했다'는 평가를 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은 수많은 말실수를 했다. '주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야 한다' '손발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등등이다. 이는 '화법'의 문제라거나 단순히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온전히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리면서 '사과'의 의미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윤 전 총장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사과'(謝過)를, 사과나무의 열매인 '사과'로 혼돈했을 리는 없다.

'개 사과'로 호남인을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조롱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내달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을 추스른다고 한다. 지역민들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